

데스크 시각



윤영기  
체육부장

유명 스타들이 과거 학교 운동부 시절 폭력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구계에서 ‘쌍둥이 자매’ 이다영·이재영이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게 시발탄이었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축구 스타 기성용과 농구 스타 현주엽 등도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팬들의 의견은 갈린다. ‘에 이제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는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본다.’ “용기를 낸 피해자를 2차 가해해서는 안 된다.”

성적 지상주의에 묻힌 개인의 인권

하지만 나는 정확한 팩트를 전제로, 더 많은 폭로와 고백이 빗발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의 절규를 과거의 일이라 해서 그냥 덮고 지나가면 사회는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폭력 논란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운동부를 다시 돌아보고 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원스포츠 문제의 중심에는 계급 폭력 구조가 있다. 요즘 회자되는 스포츠 스타들의 그것과 바탕이 같다. 이른바 높

학교폭력은 그동안 왜 묵인돼 왔을까

은 학년이 ‘깡패’ 고 계급인 세계다. “뭘 어때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잠깐이고, 나도 내 후배들 귀찮게 하면서 노는데요. 뭐… 짜증도 나고 기분 안 좋지만 선배들이 잔소리할 때나 2학년 1학년 모아 놓고 기합 주려고 해도 그냥 버틸 만해요. 코치님도 가끔 본인 어렸을 때 운동하던 얘기하면서 예전에 더 심했다고, 너희들은 깨끗하고 편하고 쉽게 운동하는 거라고 하던데요?”(‘고교 운동부 남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탐색’ 논문의 일부) 이쯤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환경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앓게 놓고 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 만할 때가 됐다. 몇 명 되지 않는 선수 모아 놓고 가해자를 찾아낸다면 설문조사 해봐야 결과는 뻔하다. 피해자가 곧장 드러나는데 누가 솔직히 설문에 응할까.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도 학생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독소다. 한국 대학스포츠협의회 포털 사이트에는 유명 대학 체육 특기자 입학 자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체 구기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가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는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8강 이내에 입상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풀자면 단체 종목에서는 자신이 속한 팀이 전국대회에서 8강 이내에 들어야 체육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로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팀 성적을 우선하다 보니 개인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권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의 뼈를 깎는 훈련과 훈련을 빚지만 ‘뺑뺑이’도 단련의 과정으로 묵인된다. 내 지식 좋은 학교 보내 프로 선수로 키우려는 부모는 당연히 ‘을’이 되고 감독은 ‘슈퍼 갑’이 된다. 사실상 경기 출전이나 진학 등 전권

을 감독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전남체육회에서 자적 정지 징계를 받은 모 운동부 지도자는 합숙소(지금은 폐지됐다) 생활 10개월 동안 학생에게 14일 가량만 귀가를 허용했다. 미뤄 짐작하겠지만 부모가 무관심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식을 보는 일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 존엄 바탕 학원스포츠 개혁을

심지어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살펴 보니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학생이 일기장에 ‘아구부 활동 때문에 죽고 싶다’는 내용을 쓴다. 충격을 받은 담임 교사는 부모와 학교 고위 간부가 참석한 면담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부모는 지도자의 폭언과 인권 침해가 원인이었음에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황스럽지만 이게 현실이다. 감독이 성적과 진학을 빌미로 학생을 볼모로 잡고 부모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깨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을 문제다.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방지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등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왜 지도자들의 폭력과 폭언이나 학생 선수 간 폭력이 근절되지 않을까. 바로 법에서 충족히 규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지배와 폭력 구조다. 인간 존엄을 해치는 계급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학원 스포츠 개혁은 요원하다. 이제 인간 존엄을 중심에 두고 학원 스포츠를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류동훈  
(사)시민행복발전소 소장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탄소 배출 원인 요소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화석 연료 이용을 억제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토양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을 줄이고, 유기농 먹거리와 자연 농업을 보급하는 운동도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운동으로는 농약이 가져오는 생태계 파괴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고생만 많이 하고, 수익을 남기지 못한 채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필자는 이를 위해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 전체 농지에서 농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도입을

약을 한 방울도 안 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가구와 사업자·법인에 일정 금액의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광주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 및 가공품, 텃밭 체험비, 친환경 먹거리 관련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제공하면 된다. 쉽게 말해 납부한 세금 만큼 쌀과 과일 등을 제공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사에 전념하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광주시 인구는 2018년 기준 148만 2000명인데, 농가 인구의 수는 2만 5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 실제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농가 인구까지 고려하면 농사를 짓는 농민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다. 나머지 98.3%의 광주시민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 주면, 이를 지역 전체 농촌으로 확대할 수 있다. 광주의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들과도 가깝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과 도농 교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소비자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시의 다양한 조직들이 직접 생산에도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공동 가공 공장,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 도시 농부 텃밭, 자연농 교육센터 설립, 소비자 교육 등 친환경 먹거리 보급을 위한 기반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농촌에는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속에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는 도시민들을 친환경 농업 생산과 가공, 체험 등 비즈니스 사업으로 유도하여 그린 뉴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덕분에 시민들의 건강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쿠바 수도 아바나도 도시 전체가 유기 농업으로 바뀐 지 10년 만에 병원에 가는 환자가 30%나 줄었다고 한다. 5·18 당시 광주시민들은 공동체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대한 항전에 나섰다. 그 시민 정신을 살려서 위기에 처한 농촌 경제와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이루어 낸다면, 그 성과는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해 갈 것이다. 광주 들녘에 개구리와 메뚜기가 다시 뛰어나고, 나비와 벌이 날아다니다며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광주 농촌 전체에 농약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화학 농약이 한 방울도 없었다. ‘친환경 먹거리 지방특별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와 법률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성공시키기 위해 차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 해당 조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로드를 설정하고, 지역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기 고



차명수  
전남도의원(강진 1·더불어민주당)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맞이하고 ‘그린 뉴딜’이 국가의 화두가 되는 시대이다. 우리 전남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된 덕분이다.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다. 물론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더욱 많지만, 전남도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초석이 단단하게 다져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에는 대학 시설 운영 경비를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한 총장이 학생 정원과 입학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설립 기준에도 고등교육법이 정한 면적과 교원 등을 적용받지 않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2022년 개교를 위한 절차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인공지능을 비롯해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에너지 기후·환경,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등 중점 연구 분야를 다섯 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다

세분화해 내년도 학부와 대학원생 1000명을 모집한다. 5월 임시 요강 발표와 더불어 211억 원을 들여 핵심 시설 5,224㎡를 착공하고 이어 7월 1000억 원을 들여 본관 동 3만㎡를 착공해 2024년까지 캠퍼스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10년간 200억 원,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한전공대를 기반으로 도전적인 연구가 이어가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를 이끌어 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학원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미달 시대가 왔음을 지적하며 대학 신설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단순히 지방에 대학 한 개를 신설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에너지 공학’ 단일 학부에서 융·복합으로 설계된 교과 과정, 프로젝트 중심의 창의 교육 모델로 전력·에너지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새로운 열쇠가 되고 있는 시기, 한전공대는 ‘한국판 그린 뉴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 양성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 민간 기업이 어우러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시사점이 크다. 보통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주위의 산업, 지역과

의 연계 측면에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많다. 반면 한전공대는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공격적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의 연구 성과물은 창업과 특허로 발전되고 다시 대학으로 연구 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다. 단순화된 전남 지역의 산업구조가 한전공대라는 전환점을 만나 다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최근 한전공대를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키우겠다고 한전공대를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빠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은 전남도에 있어 한전공대의 설립은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산업의 성공적 부흥 전략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을 염두에 둔 발안일 것이다. 대학 부지와 관련된 특혜 시비 등 깔끔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이 이미 마련됐다. 잔여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나주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엔 개발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에서도 개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의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공정한 처리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전남이 세계 속에 주목받는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과 도전의 인큐베이터로서 한전공대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해 본다.

社說

황사에 무방비 노출 야외 노동자 보호 대책을

기후변화로 고농도 황사나 미세먼지의 공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비슷한 자연 재난인 폭염 등과 달리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그제 오전 9시 광주·전남 지역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는 흑산도 936㎍/㎥, 광주 78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하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하철 공사나 아파트 건설 혹은 전기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작업을 이어가야 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침이 있긴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데다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 육외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보호 지침’을 마련,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지침대로라면 그제 같은 상황

에서는 경보가 발령된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힘든 작업은 연기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세먼지 상황이 ‘비상 저감조치 발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업체의 마스크 지원이나 야외 노동 중단, 당국의 현장 점검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 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당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만 내려진다. 특히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나 황사의 경우 아무리 농도가 높아도 비상 저감조치가 발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려면 폭염 대응 지침처럼 위험 단계별로 육외 작업 자체나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 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관련 조치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층 이상 아파트 불허 원칙 지켜져야 한다

광주시가 ‘30층 이상 아파트 건축 불가’를 공식 표명했음에도 정작 광주시도 시계획위원회는 최대 34층 신축 사업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주택건설 사업 개발 행위를 조건부 수용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지난 2015년 쌍촌캠퍼스 내 예술대학 등을 광산 분교로 통합·이전한 뒤 이곳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데 각 동은 최소 10층에서 최대 34층으로 계획됐다. 한데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입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재난영향권설정 검토 등의 조건과 함께 업체 측이 제안한 최대 34층 건축 계획을 최대 30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장했다. ‘권장’이라지만 사실상 34층 건축 계획을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나

어떤 목적(용도)이라도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던 이용섭 시장의 지난달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당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 난개발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이 시장은 “광주는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한 획일적인 도시 개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해 추진하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가 적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광주에 30층 이상 아파트 불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 미관과 경관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장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無等鼓

‘개소리’는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소리’라고 당치 않은 말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다. 최근에는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허구의 담론으로 정의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판치고 있는 ‘가짜뉴스’를 통틀어 지칭하기도 한다. ‘플리저상과 국제엠네스티 저널리즘상을 수상한 영국의 대표 저널리스트 제임스 불은 최근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득세할 수 있는지, 어떤 동기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뉴스 문제가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심각한 각층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온·오프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등 각종 ‘개소리’가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백신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돼 진실 규명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에는 정치권이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불신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진실이나 거짓 그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허구의 담론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이를 믿는 사람들도 문제다. 제임스 불은 가짜뉴스인 ‘개소리’를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탈진실은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태를 반영하기도 한다. 가짜뉴스인 ‘개소리’가 아무리 함심한 수준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매체는 습관처럼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미디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